

- 해설** ① [X]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② [X]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이다.
 ③ [X] 사회자본론에 대한 설명이다.
 ④ [X] 시차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178 ~ 181

▶ ⑤

03 다음 중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적 통제는 어떤 행동이 통제기준에서 이탈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교정해 나간다.
- ② 통제주체에 의한 통제 분류의 대표적인 예는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 통제이다.
- ③ 외부적 통제의 대표적인 예는 국회, 법원, 국민 등에 의한 통제이다.
- ④ 사후적 통제는 목표수행 행동의 결과가 목표기준에 부합되는가를 평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통제이다.
- ⑤ 부정적 환류통제는 실적이 목표에서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후속되는 행동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정하는 통제이다.

해설 ① [X] 동시적 통제에 대한 설명이다. 사전적 통제는 목표실천 행동이 목표에서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는 통제이다. 즉, 그러한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여 방지 하는 것이지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교정해나가는 방법이 아니다.

<통제시점에 의한 분류>

사전적 통제	목표실천행동이 목표에서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는 통제
동시적 통제	목표수행행동이 진행되는 동안 통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해가는 통제
사후적 통제 (환류통제)	목표수행행동의 결과가 목표기준에 부합되는가를 평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통제

<시정조치에 의한 분류>

부정적 환류통제	실적이 목표에서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후속되는 행동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정하는 통제, 목표수행행동의 결과를 거부 또는 부정하는 통제
긍정적 환류통제	실적이 목표에 부합되는 것을 발견하고 후속되는 행동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정보를 환류시키는 통제(확장적 통제)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742~744

▶ ①

04 다음 중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갈등해소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 상위 목표의 제시, 자원 증대, 태도 변화 훈련,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 ② 적절한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의사전달 통로의 변경, 정보전달 억제, 구조적 요인의 개편, 리더십 스타일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 ③ 194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던 행태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갈등이란 조직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았다.
- ④ 마치(March)와 사이먼(Simon)은 개인적 갈등의 원인 및 형태를 비수락성, 비비교성, 불확실성으로 구분했다.
- ⑤ 유해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상황이나 출처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 않고 거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 해설**
- ① [○] 갈등을 해소하는 전략에는 공동의 적 확인, 상위목표의 제시, 자원증대, 회피, 완화, 문제해결, 타협 등의 방식이 있다.
 - ② [×] 의사전달 통로의 변경, 정보전달 억제, 리더십 스타일 변경 등은 갈등의 조성전략에 해당하지만, 구조적 요인의 개편은 갈등의 해소전략이다.
 - ③ [○] 갈등에 대한 행태론적 견해는 조직 내 갈등을 필연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때론 갈등에도 순기능적 측면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 ④ [○] 마치(March)와 사이먼(Simon)은 개인적 갈등(개인이 겪는 내면적 갈등)의 조건으로 의사결정대안의 수락불가능성(unacceptability), 비교불가능성(incomparability), 불확실성(uncertainty)을 들었다.

수락불가능성	결정자가 여러 대안이 가져올 결과는 알지만 그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비교불가능성	결정자가 대안들의 결과는 알지만 그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불확실성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

⑤ [○] 갈등상황이나 그 출처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응하도록 만드는 전략은 갈등을 해소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전략의 실현에는 인간관계에 치중한 기법들이 많이 쓰인다. 이 외에도 조직 상의 배열을 적극적으로 변동시켜 갈등상황을 제거하는 전략도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15~420



05 다음 중 위원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진다.
- ② 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이 없다.
- ③ 토론과 타협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조정이 가능하다.
- ④ 위원 간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다양한 정책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개진이 비교적 용이하다.

해설 정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구속력을 기준으로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의결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① [×] 의결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중간조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있으나 집행권은 없다.

<성격과 권한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의 구분>

구 분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의결위원회	행정위원회
권한 및 성격	자문 목적의 참모기관으로 자문에 한정하며, 사안에 따라 조사분석 기능 수행, 의사결정의 구속력이 없음.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중간조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있으나 집행권은 없음.	독립 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의사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있고, 행정집행권을 소유. 경우에 따라 준입법권과 준사법권 보유
예	기업 및 부처(정책) 자문위원회	각 부처 징계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75, 376



06 다음 중 정부운영에서 예산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 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의 산출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다.
- ② 예산은 정부정책 중 보수적인 영역에 속한다.
- ③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 ④ 희소한 공공재원의 배분에서 기회비용이 우선 고려된다.
- ⑤ 정보를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 프로그램 예산, 기획 예산, 성과주의 예산, 영기준 예산 등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해설 ⑤ [X] 예산제도 개혁을 예산의 정보제공 관점에서 보면, 예산개혁이란 기존의 정보를 재구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더욱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제도는 순차적으로 품목별 → 성과주의 → 기획 → 영기준 예산 등의 순서로 발전해 왔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675



07 다음 중 예산심의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한을 1년으로 한다.

ㅁ.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해설 ㄱ [X]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심사할 수 없다.

국회법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⑧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ㄴ [O] 헌법 제57조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ㄷ [O] 국회법 제84조 제5항

국회법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ㄹ [X]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정한 제44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예결위는 상설화되었다.

국회법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ㅁ [O] 국회법 제79조의 2 제2항

국회법 제79조의2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②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94~596, 642



08 다음 중 공무원의 행동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다.
- ③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직자는 부패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⑤ 모든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⑤ [X] 1급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53, 559, 562, 566~568



09 다음 중 정책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원주의는 개인 차원에서 정책결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수월하다.
- ② 조합주의(corporatism)는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 ③ 엘리트주의에서는 권력은 다수의 집단에 분산되어 있지 않으며 소수의 힘 있는 기관에 집중되고, 기관의 영향력 역시 일부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철의 삼각과 같이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 ⑤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시각을 반영한다.

해설 ① [X] 다원주의는 정책 권력이 소수의 지배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개인차원에서는 정책결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198~206

▶ ①

10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태론적 접근법은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 ② 특성론적 접근법은 성공적인 리더는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 ③ 상황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어떠한 행동이 리더십 효과성과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 ④ 거래적 리더십은 합리적 과정이나 교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영감(inspiration) 등을 강조한다.

해설 ③ [X] 리더의 행동(행태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은 행태론적 접근법이다. 리더십의 상황론적 접근법에서는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의 특성·행동 등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 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05~412

▶ ③

15 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책임운영기관은 신공공관리론의 성과관리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고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국무총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 ⑤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조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해설** ① [○] 책임운영기관은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 기관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신공공관리론의 원리에 의해 등장한 정부조직이다.
- ② [X]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고, 종류별·계급별 정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기본운영규정 X)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 1.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 ③ [○]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며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동법 제12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동법 제49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국무총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 ⑤ [○]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조건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법 제7조 【기관장의 임용】 ② 기관장의 임용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82, 384



16 다음 <보기>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반적으로 규제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피규제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_____(A)라 한다.

- ① 규제기관이 행정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규제순응여부를 추적·점검하기 어려운 경우에 (A)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 ② (A)는 피규제집단의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규제이다.
- ③ 규제기관의 기술적 전문성이 피규제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불가피하게 (A)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 ④ 피규제집단은 여론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자신들에 대한 규제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규제이슈를 선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A)를 시도하기도 한다.
- ⑤ (A)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평성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 규제의 주체는 정부가 일반적이지만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부의 규제 수행을 직접규제라 하고, 민간기관에 의한 규제는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피규제산업 또는 업계 스스로 하는 것을 (A) 자율규제라고 한다.

② [X] (A)는 직접규제 방식이 아닌 자율규제 방식이다. 자율규제 방식은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이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직접규제 방식이 민간에 대한 과도한 개입, 민간과 신뢰 구축의 훼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규제기관의 기술력·전문성 부족 또는 규제기관의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율규제, 공동규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규제의 수행 주체에 따른 분류>

직접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방식 • 민간에 대한 과도한 개입, 민간과 신뢰 구축의 훼손가능성 야기 	정부
자율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 • 직접규제는 규제의 주체와 객체가 다르지만, 자율규제는 민간이 스스로 규칙을 설계하고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민간
공동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라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성격을 가짐. 	민간

*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는 규제권한을 피규제자 스스로에게 부여해 직접 규제의 부작용을 극복하면서도 규제 목적의 달성이 가능함.

참고 ▶ 2017 compass 행정학 p.30



17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순응확보전략을 각 유형에 맞게 연결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 보 기 >

㉠. 황무지를 초지로 개간하여 조사료(bulky food)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개간한 초지면적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작업장에서의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TV광고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배출하는 경우 해당 쓰레기봉투는 수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명료하게 명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전략	촉진전략	유인전략	규제전략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해설 ③ [○]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는 도덕적 설득, 유인 또는 보상, 처벌 또는 강압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

- 설득전략(㉡) : 정책의 도덕적 당위성을 설득하거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
 -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설득하는 TV 광고
- 촉진전략(㉢) : 순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석하고 지원·관리하는 방법
 - 신규사업에 대한 선발기준 안내, 관련 서류 지원
- 유인전략(㉠) : 순응 시 보상과 편익을 제공하는 방법
 - 보조금 지급
- 규제전략(㉢) : 불응 시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거나 혜택을 박탈하는 방법
 - 재활용품 배출시 쓰레기봉투 미수거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85, 286

▶ ③

18 다음 중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먼(Simon)은 결정자의 인지능력의 한계, 결정상황의 불확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결정은 제한적 합리성의 조건하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 ② 점증모형은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합리모형과는 대조적으로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 ③ 혼합모형은 점증모형의 단점을 합리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가정하는 결정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이다.
- ⑤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 해설**
- ① [○] 사이먼(Simon)은 만족모형을 통해 현실에서의 여러 제약요인(인지능력, 시간 경비의 부족 등)으로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 ② [○]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정치적 현실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모형이다(Lindblom).
 - ③ [○]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주장한 모형으로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지나친 보수성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한 모형이다.
 - ④ [○]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조직화된 혼란(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을 강조한 모형으로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관한 대표적 모형이다.
 - ⑤ [×] 합리모형에서는 기술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정치적 합리성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50, 251, 253, 254, 257

▶ ⑤

19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이 인정되어 조례를 통해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자치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 ④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가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라고 할 수 있다.
- ⑤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형 방식을 적용한다.

- 해설**
- ① [×]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어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탄력세율, 재산과세의 과표 등과 같은 자치재정권이 인정된다.
 - ② [○]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르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 자치사법권은 자치단체 스스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구형·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치사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④ [○] 지방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리 또는 권한으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재원을 넘겨받아 자율적인 사무 처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 ⑤ [○] 1988년 이후의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기능배분방식은 포괄적 예시주의(예시형)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797, 798, 799, 800, 807

▶ ①

20 다음 중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령통일의 원리가 배제되고 이중의 명령 및 보고체계가 허용되어야 한다.
- ② 부서장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공개적이고 빈번한 대면기회가 필요하다.
- ③ 기능부서의 장들과 사업부서의 장들이 자원배분에 관한 권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조직의 환경 영역이 단순하고 확실한 경우 효과적이다.
- ⑤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권력투쟁을 유발하기 쉽다.

해설 ① [○]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부서의 통제권한은 수직적으로, 사업부서 간 조정권한은 수평적으로 흐르는 이원적 권한체계가 특징이다.
 ② [○] 상관은 부하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들 간에 대면, 협력,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요구된다.
 ③, ⑤ [○]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갈등으로 갈등해결에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하므로 권력의 공유가 필요하다.
 ④ [X] 매트릭스 조직은 조직의 환경영역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경우(단순, 확실 X) 효과적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25, 326

▶ ④

21 다음 중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에서 가치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을수록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 대상이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체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측면보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려는 측면을 강조한다.
- ③ 신제도주의는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제도설계와 변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④ 논변적 접근방법의 진정한 가치는 각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성을 점검하고 상호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에 있다.
- ⑤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은 연구가 지나치게 기술적(descriptive) 수준에 머물고 정태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해설 ③ [X]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람과 동등한 위치의 독립변수 내지는 사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의 독립변수로 고려하는 입장이다.
 ④ [○] 논변적 접근방법의 진정한 가치는 이와 같이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각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성을 점검하고 상호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에 있다.
 ⑤ [○]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은 법과 제도 이면에서 움직이는 동태적인 인간관계나 권력갈등 또는 인간의 심리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연구가 지나치게 기술적 수준에 머물고 정태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125, 131, 141

▶ ③

22 다음 중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80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 ② 옴부즈만은 입법기관에서 임명하는 옴부즈만이었으나 국회의 제청에 의해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옴부즈만도 등장하게 되었다.
-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체제 외의 독립통제기관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옴부즈만의 일종이다.
- ⑤ 시정조치의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비행의 시정이 비행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 해설**
- ① [○]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 ② [○] 옴부즈만은 입법기관에서 임명하는 옴부즈만이었지만, 국회의 제청에 의해 행정 수반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총독·국왕이 임명하는 옴부즈만도 나오게 되었다.
 - ③ [○] 우리나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체제 내의(행정체제 외의 ×) 독립통제기관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옴부즈만의 일종이다.
 - ⑤ [○] 옴부즈만 제도는 일반적으로 시정조치의 법적 강제권한이나 정부부처의 결정을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공표·보고·권유·설득의 수단을 사용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746, 747, 748

▶ ④

23 다음 중 국민경제활동의 구성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예산의 분류로 옳은 것은?

- ① 기능별 분류
- ② 품목별 분류
- ③ 경제성질별 분류
- ④ 활동별 분류
- ⑤ 사업계획별 분류

- 해설**
- ① [×] 일반국민들이 정부예산을 통해 정부활동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예산정보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한다.
 - ② [×] 인건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여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③ [○]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이 국민경제활동의 구성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분류로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④ [×] 활동별 분류는 사업계획별 분류를 다시 세분화하여 예산편성이나 회계책임을 더욱 용이하고 명확하게 해준다.
 - ⑤ [×] 사업계획별 분류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작성에 기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재정소요와 사업진도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620, 621

▶ ③

24 다음 중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운송사업은 지방직영기업 대상에 해당된다.
- ②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지방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법인 등)가 출자를 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 자본금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해설 ①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은 지방직영기업 대상에 해당된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② [○]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항

동법 제53조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③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

동법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 지방공기업법 제51조에 따르면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51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3분의 1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제53조 【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853



